21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 ‘민주주의 세대’의 출현과 민주주의의 ‘필수재’ 시대의 도래

## : 강한 민주화와 약한 민주주의 시대의 과제

이 영 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 ‘민주주의 세대’의 출현과 민주주의의 ‘필수재’ 시대의 도래

## : 강한 민주화와 약한 민주주의 시대의 과제

이 영 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01 들어가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개헌 여부와 촛불의 힘이 구래의 지역주의적 정치구도를 어느 정도 재편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낮은 투표율, 지역적 이슈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실시되는 전국 투표로 적폐청산 등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소위 지방선거의 '판세'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여론조사가 공표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던 '샤이'세력의 존재와 규모, 선거가 끝난 후에야 결과적으로만 알 수 있는 유권자들의 '현명함'과 '균형감'으로 인해 선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생존을 도모하는 제3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진행되고 있고,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았던 한반도 정세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급반전되어 메가톤급 훈풍으로 작용할 모양새다. 영토조항과 같은 개헌의 내용이 새로운 균열구조를 형성해 유권자 편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파동 사례와 같이 본선보다 어려운 예선인 공천과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념-지역적 매개 고리로 보수세력이 독점해온 영남의 정치지형이 변할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간에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집회와 대선에 이어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향후 개혁의 폭과 흐름이 보다 확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효능감은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이 '힘'을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힘의 정치'에 기초한 것이다. 적폐양산의 주범이었던 검찰이 정권교체 후 적폐청산의 선봉에 나설 때 느껴지는 효능감은 이런 '힘의 정치'에 의한 효능감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적폐세력에 대해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에서 느끼는 효능감은 검찰이 적폐를 처리하는데 유능하다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도입관련 논쟁은 검찰에 대한 효능감의 결핍이 아니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검찰의 유능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의 증대와는 다르게 정치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거에서 어떠한 세력의 압승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의 '정치'는 갑자기 유능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지만, 그것이 한국의 정치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국종 교수 관련 논쟁처럼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한명의 또는 다수의 유능한 리더를 넘어선 '유능한 정치 체계'이다. 즉, 정치가 한국사회와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또 실질적으로 정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유능한 정치'의 필요성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필수재로 인식되는 '민주주의의 황금기' 시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데에 있다. 민주화 세대에 이어 등장한 '민주주의 세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이중적 성취의 수혜와 촛불집회의 진화를 경험하며 성장한 탈물질주의적 성향의 세대이다. 민주주의 세대는 한편으로는 촛불혁명과 정권교체, 적폐청산이라는 강한 민주화와 구 정치체계·제도, 정치 불신의 잔존이라는 약한 민주주의가 병존하는 시대에 등장했다. 강한 민주화를 통해 체득한 정치적 효능감은 약한 민주주의 시대에는 언제든지 정치 무관심 내지 혐오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세대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촛불집회와 정권교체, 그리고 일련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체득한 '정치적 효능감'을 민주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개혁이 요구된다.

# 02 촛불집회의 진화와 온전한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촛불시위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진행되고 있다. 촛불시위는 혁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항쟁, 집회, 시위로 불리기도 한다. 특징적인 것인 촛불시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과제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혁과 시민의회 또는 민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과제로 제시한다. 항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촛불시위의 요구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수용과정에 주목하고 촛불시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혁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촛불시위'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촛불시위는 민주의의 퇴행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기 보다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전환점'(최장집 2017: 190)이다. 이 입장에서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의 타협과정에 주목하고 사회적 갈등이 정당과 의회를 통해 제도 안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촛불시위는 촛불을 든 시위를 가리킨다. 추모와 항의의 성격이 강했던 촛불시위가 직접민주주의 또는 국민주권의 표상으로 떠오른 것은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부터이다. 2004년 촛불시위는 자신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한 대의제에 대한 탄핵'이었다. 동시에 국민들이 자신들을 집단적 주체로서의 주권자로 드러내며, 대의될 수 없거나 대의제가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국민주권의 영역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를 이슈로 하여 전개된 2008년 촛불시위는 촛불집회의 의제를 정책적 현안과 국민주권의 제약에 관한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체적 측면에서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범주를 유권자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확장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된 촛불시위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이전의 촛불집회를 초월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대통령 탄핵을 넘어 경제,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국가·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로 확대되었다(오현철 외 2017, 39)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된 촛불집회는 이전의 '촛불집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촛불시위는 점차 진화해서 집합적 주체로서 시민들의 광장(길거리) 의회를 형성했다. 집합적 주체로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집회 내지 민회라는 의미에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된 촛불시위는 명실상부한 '촛불집회'(candle assembly)라고 부를 수 있다. 에셈블리(Assembly)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민회를 나타내는 '에클레시아'로 집회라는 의미를 갖는다. 촛불집회는 이러한 집회(assembly)로서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촛불집회라는 광장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를 통해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영역의 민주주의 수준을 시민의 민주주의 수준으로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1〉 민주주의 우월성 지지율 연도별·세대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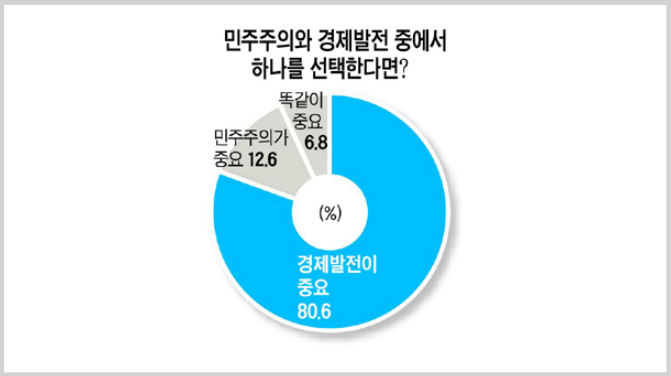
**출처 : 내일신문(2017/11/13)**

촛불집회 이전까지는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70% 미만으로 안정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림 1〉에서와 같이 촛불집회의 열기가 고조되었던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하여 민주주의가 안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70% 이상의 시민이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보다 고무적인 것은 민주주의가 다른 정부형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20대~40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촛불시위 이후에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 03 경제발전과 견주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내지 퇴행은 박근혜 대통령시기 극에 달했지만 그것에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보편화되었지만 동시에 다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다른 가치들과 병렬적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미 '성취된 민주주의'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보다는 경제발전이나 안보 등 다른 가치를 선호하도록 하였다.

**〈그림 2〉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2007년)**




**출처 : 조선일보(2007/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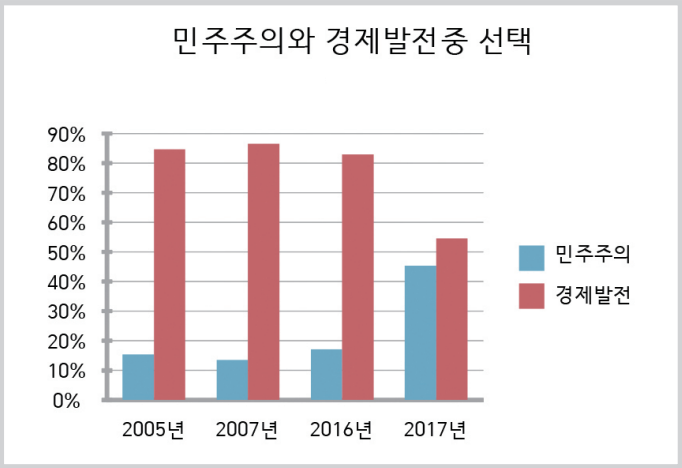
2007년 한국정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80.6%가 '경제발전'을 선택했고,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선택은 12.6%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제17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제17대 대선의 경우 구래의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해체되어 개혁(민주)대 경제발전(안보)의 구도로 치러졌는데 경제발전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제18대 대선에서는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민주주의 위기 내지 퇴행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박근혜 대통이 당선되었다. 여기에는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같은 관권·부정선거도 영향을 미쳤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표 1〉 연도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선택

| | 민주주의 | | 경제발전 | | 기타 | 비고/출처 |
|---|---|---|---|---|---|---|
| | 훨씬 더 중요 | 좀 더 중요 | 좀 더 중요 | 훨씬 더 중요 | | |
| 2005년 | 15.3 | | 84.6% | | | 국민일보(2005/12/07) |
| | 4.8 | 10.5 | 46.4 | 38.2 | | |
| 2007년 | 12.6 | | 80.6 | | 6.8 | 기타는 둘 다 중요<br>조선일보(2007/02/02) |
| 2016년 | 17.1 | | 82.9 | | | (조진만, 2016:125)<br>(가상준, 2017:144) |
| 2017년 | 45.4 | | 54.6 | | | 가상준(2017: 144) |
| | 14.8 | 30.6 | 36.8 | 17.8 | | |

〈표 1〉에서와 같이 2005년과 2007년, 2016년 4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 집회 이후인 2017년 진행된 조사에서도 일련의 국정농단사태와 촛불집회, 대통령탄핵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의 우위는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는 현격히 강화되었다.

〈 그림 3〉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중 선택의 변화




〈그림 3〉은 촛불집회 이후 변화된 국민의 선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촛불집회 이전의 조사에서는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었으나 촛불집회 이후에 민주주의는 비록 열세이기는 하나 경제발전에 견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 04 ‘민주주의 세대’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필수재화

역사상 유례없는 다수 국민이 참여와 지지로 민주적 성취를 가져온 촛불집회는 통치영역에서의 민주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는 반공이나 경제발전에 방해가 되거나 아직 한국적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사치재’로 취급되었다. 끊임없이 전개되었던 일련의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사치재’에서 ‘보통재’로 전환시켰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시기의 ‘사치재’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쟁취된 이후 30년간 한국 민주주의는 ‘보통재’적 성격에 머물러 있었다.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는 필요하고 또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경제발전 등과 견주게 될 경우에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때로는 다소 지체되어도 용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촛불시위 이후에도 ‘보통재’로서 민주주의 성격은 유지되었다. 앞의 〈그림 3〉에서와 같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중 민주주의에 대한 선택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많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국민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는 보통재에 머물러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 세대인 20대와 30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선택이 경제발전에 대한 선택을 능가함으로써 민주주의 필수재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국민적 차원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필수재‘로의 변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 조사 결과를 세대별로 살펴볼 때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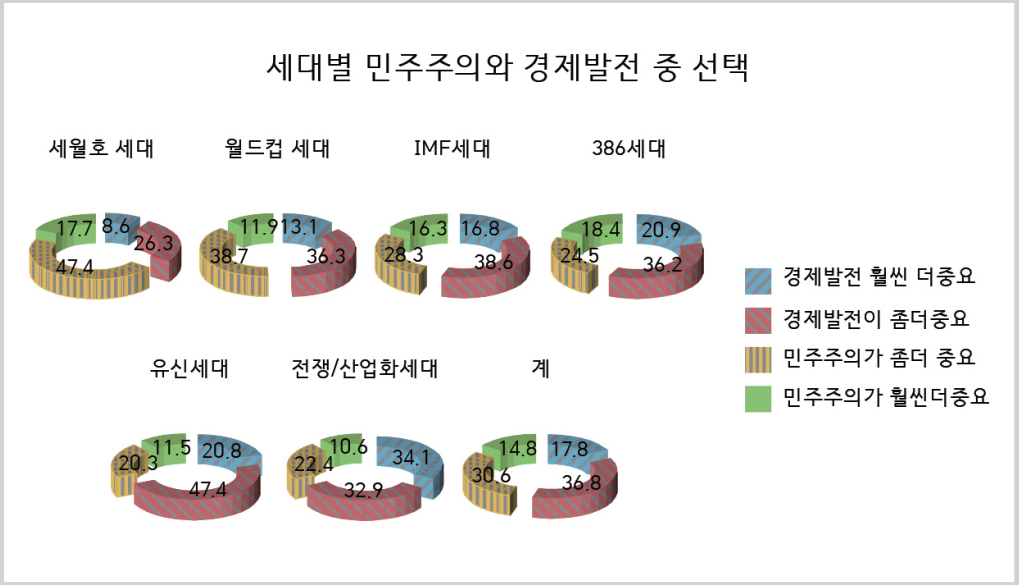
〈표 2〉 세대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선택

| 세대구분 | 세월호 세대 | 월드컵 세대 | IMF 세대 | 386 세대 | 유신 세대 | 전쟁 /산업화세대 | 계 |
|---|---|---|---|---|---|---|---|
| 출생연도 | 1988~ 1998년 | 1979~ 1987년 | 1970~ 1978년 | 1960~ 1969년 | 1952~ 1959년 | 1951년 이전 | |
| 경제발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 8.6% | 13.1% | 16.8% | 20.9% | 20.8% | 34.1% | 17.8% |
| 경제발전이 좀 더 중요하다. | 26.3% | 36.3% | 38.6% | 36.2% | 47.4% | 32.9% | 36.8% |
| 민주주의가 좀 더 중요하다. | 47.4% | 38.7% | 28.3% | 24.5% | 20.3% | 22.4% | 30.6% |
| 민주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 | 17.7% | 11.9% | 16.3% | 18.4% | 11.5% | 10.6% | 14.8% |

**출처 : 가상준 2017: 표1과 표17을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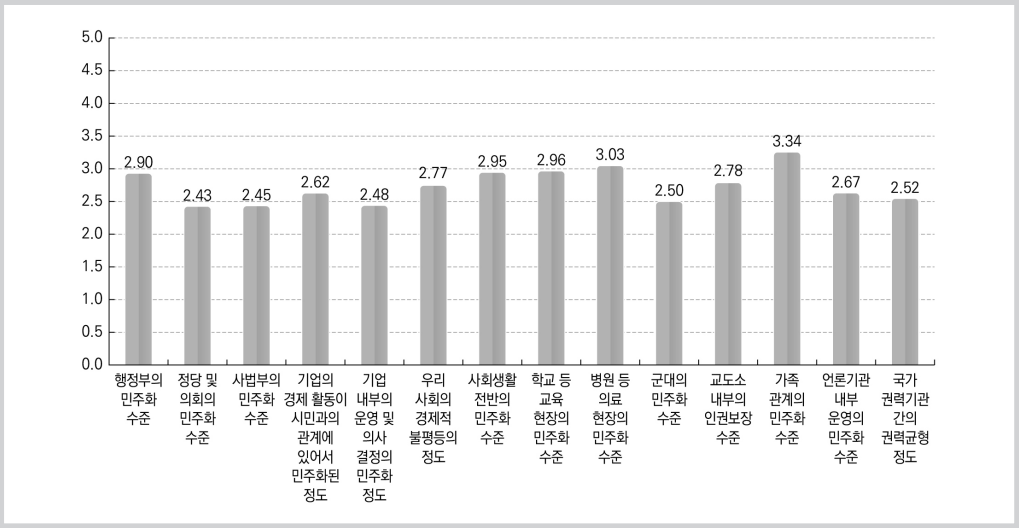
〈표 2〉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각각 65.1%와 50.6%로 경제성장에 대한 선호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소위 '넘사벽'이었던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를 30대 이하의 세대에서 민주주의가 넘어선 것이다. 촛불집회의 '혁명적 성격'은 그 시위의 규모나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재화' 민주화 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세대'를 출현시켰다는 데 있다.

〈그림 4〉 세대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선택




민주화세대인 386세대도 열지 못한 민주주의 필수재 시대를 20대와 30대가 열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세대가 가족과 학교 현장 민주화의 수혜를 받은 세대라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5〉 사회 각 부분의 민주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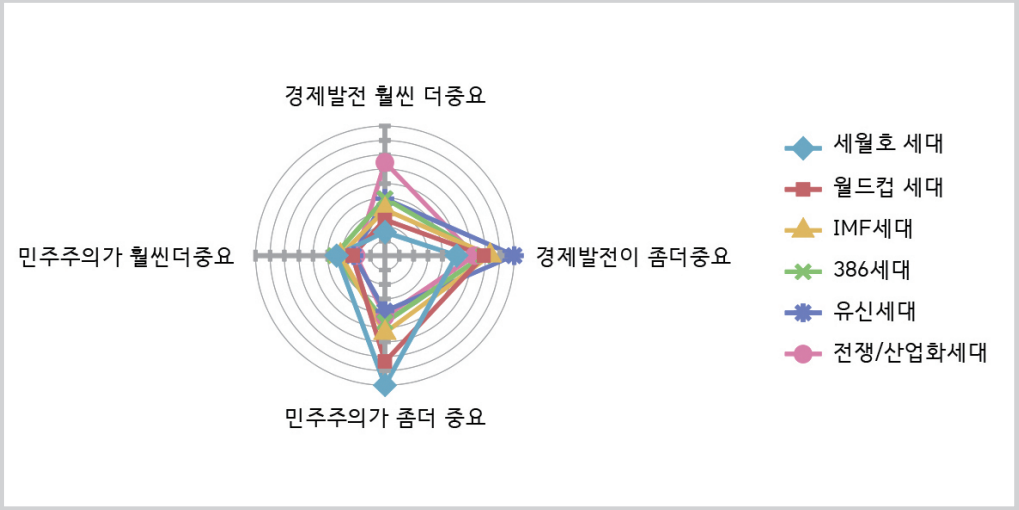



**출처 : 시민의식종합조사 결과보고서(정일준 외 2017: 41)**

〈그림 5〉는 사회 각 부분의 민주화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 사회의 여러 부문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민주화되었는가?를 묻는 질문(매우 낮다 1점, 매우 높다 5점)에 가족 관계의

민주화 수준(3.34), 병원 등 의료현장의 민주화수준(3.03), 학교 등 교육 현장의 민주화 수준(2.9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 및 의회의 민주화 수준(2.43), 사법부의 민주화 수준(2.43), 기업 내부의 운영 및 의사결정의 민주화 수준(2.48)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모든 이념성향(보수: 3.38, 중도: 3.32, 진보: 3.24)과 연령대에서 가족관계의 민주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촛불집회와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교육 분야의 민주화 수준이 정치 분야의 민주화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가족단위의 시위 참여는 촛불시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것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관계의 민주화 수준이 높은 것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림 6〉 세대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선택의 특징**




민주주의 세대는 가정과 학교의 민주화에 따라 사적 또는 미시적 수준에서 체득된 민주주의와 국정농단의 목격과 촛불집회, 정권교체라는 집단적 성취 경험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림 6〉을 살펴보면 새로운 민주주의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민주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선호가 크게 높지 않다는 알 수 있다. 이들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민주주의가 좀 더 중요하다'에 대한 선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민주화에 대한 강한 신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기본적 권리 내지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시에 민주주의 세대는 '경제발전이 훨씬 중요하다'는 선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서구와 같은 탈물질주의 성향을 갖는 세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필수재화', '탈물질화'와 더불어 다양한 '민주적 가치의 병렬화'는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변화의 지점이자 민주주의 세대의 하나의 특징이다. 최근 10년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적 통치의 부활은 민주화운동과 같은 저항을 필연적으로 재생했다. 그것은 분명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과거의 민주화운동과는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특징과 성격을 갖고 있다. 평화적인 집회방식, 권위 있는 중앙 지도부를 대체한 연대와 자발성에 기초한 집회 운영, 해학과 풍자 등과 함께 사드배치, 인권, 양극화, 청년, 실업, 농업문제, 젠더, 선거권, 차별폐지, 노동개악 등 다양한 의제들이 촛불집회의 의제로 다루어졌다. 민주대 반민주화 같은 거시적, 진영적, 양자 대립적이거나 또는 주요모순, 기본모순과 같이 계층적이거나 선후차적이지 않고, 다양한 가치와 과제들이 수평적이고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주주의 세대는 민주적 성취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민주화세대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덜 정치 지향적이며, 덜 정치 지향적 만큼 문화 지향적이다.

# 05 맺는말 : 강한 민주화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권력의 집중이라는 대통령제의 특성에 모든 부분을 국가권력이 직접 통제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 권위주의의 특성이 가미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그러나 가족과 학교와 같은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국가적·거시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1] 촛불집회는 이와 같은 시민적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발전 내지 변화를 드러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발전을 따라오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함으로써 임계 치를 벗어난 정치권력의 민주화 수준을 사회의 수준에 맞게 돌려놓는 계기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일련의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들이 퇴행한 정치적 수준의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면, 촛불집회에서 시민의회의 형성과 평화로운 시위,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표출은 이미 발전 내지 변화된 시민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수준과 양상을 표출 내지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촛불집회와 정권교체로 인해 민주화 중요성과 효능감이 증대된 시기적·국민적 요인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발전보다 민주주의를 우선시 하는 '민주주의 세대'가 출현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황금기'의 시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강한 민주화에 상응하는 강한 민주주의 체제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7〉은 촛불집회 이후 정치권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촛불집회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비슷하다)는 응답이 49.2%에 달했으며 이전보다 못하다는 응답도 11.9%에 달했다.

1) 이러한 사회 각 부분의 민주화 수준의 불균등한 발전은 앞선 촛불시위의 성격 논쟁과도 관련되어 있다. 촛불시위를 정치권력의 정상화 문제로만 국한해 바라볼 경우 '촛불시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촛불시위가 가져다준 민주주의의 변화는 정치영역에서 진보와 보수로의 세력재편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상 변화와 다양한 민주적 가치의 병렬화까지 이어진다. 즉 정치권력(세력) 또는 정치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적·사회적·문화적 변화까지를 고려한다면 촛불시위는 그 직접적 성취를 넘어서는 '혁명'적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다.

〈그림 7〉 촛불집회 이후 정치권의 변화

출처 : 내일신문(2017/11/14)

강한 민주화와 약한 민주주의의 지속은 정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의 상실로 이어진다. 촛불집회와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주권자로서의 효능감과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민주적 대통령이라는 내적·외적 효능감을 동시에 체험하였다. 하지만 직접행동을 통한 내적 효능감과 대통령 리더십에 근거한 외적 효능감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선거에 따른 세력관계 재편에 등에 의한 대리적·대외적 정치적 효능감을 넘어 주체로서의 참여를 통해 일상적으로 내적 효능감을 주는 강한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한다. 내적 효능감은 바로 촛불집회에서 주권자 내지 주체로서 시민들이 체험한 효능감이다.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가져왔지만 선거 날에만 자유로운 시민을 넘어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정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민항쟁은 역사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임계점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와 예외적으로 전개되는 항쟁의 사이, 광장과 제도정치를 매개할 정치적 영역, 즉 시민정치의 영역이 필요하다.(이영제 2017: 14)

'시민정치'는 더 이상 권력을 대표 내지 정치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일상적으로 통제되고 분배되고 공유되는 강한 민주주의이다. 시민정치는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대행자에 의한 주체 없는 민주주의를 넘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과 주체로서의 시민이 일치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시민정치에서 정치적 효능감은 선거나 투표에서의 승패가 아니라 참여, 연대, 타협, 숙의, 공감, 동의, 양보, 배려 등 시민적 의무와 권리의 실현과, 시민적 덕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민정치에서 정치적 효능감은 승자(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갖는 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일상적 효능감이다.

# 참고문헌


가상준. 2017. 『6.29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푸른길.

오현철 외. 2017.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확대와 의회정치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7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이영제. 2017. 「민주화 30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집회의 이미와 과제」, Issue & Review on Democracy 9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정일준 외 2017: 41, 정일준 외. 2017. 『201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시민의식종합조사결과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조진만. 2016. 「민주주의 대 경제발전: 한국 유권자의 선택」. 『동서연구』 제28권 6호, pp. 113~135.

최장집. 2017.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한국의 민주화 30년, 세계보편적 의미와 전망』. 6월민주항쟁30년·촛불시민혁명 원년기념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 ‘민주주의 세대’의 출현과 민주주의의 ‘필수재’ 시대의 도래

## : 강한 민주화와 약한 민주주의 시대의 과제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8년 1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9 772508 324001 01
ISSN 2508-3244